

정당현수막이젠 합법화, 지자체는 곤혹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거리 게시 허용 시행 한 달, 까다롭고 많은 기준에 정비 현장은 혼선 총선 예비후보 연말연시·명절 인사 현수막까지 난립

내년 총선을 앞둔 올 연말연시에도 광주 도심 곳곳에 각 정당 또는 출마 예비 후보자 명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예년과는 달리 지난해 말 바뀐 법령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대상에서 제외, 합법화됐다.

그러나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선 지자체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 현수막의 적법 여부를 일일이 헤아려 정비하기 여의치 않고 형평성 시비 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8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0일자로 개정 시행됐다.

주된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8조(적용 배제) 조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할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같은 법 3조)와 금지·제한 규정(4조) 조항에서 최대 15일간 예외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당 또는 당 직책자(당 대표·당

협위원장 등)가 설치한 현수막이어야 한다. 정당·설치업체의 명칭 및 연락처와 표시(게시) 기간 등도 전면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설치 위치와 높이가 교통 지장·사고 위험 등을 높여서는 안 된다.

개정 법령 시행 한 달째, 일선 자치구는 '정당 현수막'을 분별하고 정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연말연시였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 동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700여 장을 적발해 철거했다. 이 중 정치 관련 현수막은 5장이었다.

서구는 같은 기간 불법 현수막 600여 장을 정비했는데 이 중 100여 장이 정당 또는 예비후보·무소속 의원 명의로 걸린 정치 현수막인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남구는 지역 내 철거한 불법 현수막(1700여 장) 중 정당 관련 내용은 14장이었다. 전체 정당 현수막 79장 중 17%는 불법이었다.

광산구도 연말연시 현수막 950여 장을 봤는데 이 중 70여 장이 정당 또는 정치인이 내건 것이었다.

반면 북구는 이 기간에 주택 분양·영업 광고 등 불법 현수막 2500여 장

을 봤지만, 정치 관련 정비 실적은 사실상 없었다. 정당 현수막 대부분이 합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자치구들은 현실적으로 표기 내용·기간 등 정당 현수막 적법 판단 기준(총 5개)을 일일이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수막을 내건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게시 허용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현장 단속·정비반원마저 법령을 혼동해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규정을 알고도 정당 명칭, 예비 후보자 성명·사진 등 메시지를 부각하고자 교묘하게 필수 표기 내용을 현수막 뒷면이나 구석에 적는 일도 흔하다.

때문에 게시 허용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불법 현수막은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 촬영 사진을 확인한 뒤에야 철거하고 있다.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과거처럼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일제 정비할 수 없고 철거 여부를 따지느라 차량·인력 모두 도로 위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갓길 정차, 정비반원 하차·도보 이동에 위험 부담이 크다.

더욱이 개정 법령 시행 직후 맞은 연말연시에 때 이른 설 명절로 곳곳

에 새해 인사말 수준의 불법 현수막까지 마구 내걸면서 정비 수요와 함께 고충도 가중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른 반발 여론도 부담스럽다. '왜 예전처럼 현수막을 떼내지 않느냐', '소상공인이 내건 현수막만 칼같이 단속하고 정치인만 봐주는냐', '무소속 정치인만 차별하는 것 같다' 등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A 자치구 관계자는 "정비반원 대상으로 바뀐 규정을 교육했지만 하루에 만 수백 장씩 떼내는 현수막 정비 업무 특성상 녹록치 않다"면서 "정치권 인사들도 현수막 요건이 헛갈린다면 문의가 잦다"고 전했다.

B 자치구 공무원은 "영문 모르는 시민들은 '예전과 달리 정치인 현수막을 떼때 철거 안 한다'며 민원을 제기한다. 시행 초기라지만 개정 취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괜한 욕을 듣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구 담당자는 "인지도가 낮은 군소정당은 정당법상 등록이 됐는지, 게시가 허용되는 당내 직책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현수막 정비에 드는 시간과 사고 위험 부담도 커진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 게시대 등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수막의 경우 면적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지나 상한선은 1인당 500만 원이다. 서선욱기자



담양 생활안전순찰대, 2022년 운영 성공적 마무리

담양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해 12월 30일 곡성군 회양복지 기동서비스 활성화 유공 군수 표창을 받으며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202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소방, 취약계층 대상 화목보일러 점검 실시

진도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양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지역민의 큰 호응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동부소방, 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주의 당부

광주 동부소방서는 공동주택과 고층 건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판매시설 등과 같은 대공간 지하층에 대한 피난 안전관리에 주의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무안경찰,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회의 개최

무안경찰서는 지난 5일 무안군청과 해맞이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경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TF회의 개최

순천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전 기능 담당계약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안전행사 관리를 위한 TF회의를 개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설 앞두고 미리 성묘 설을 2주일 앞둔 8일 오전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성묘를 하고 있다.

광주 교사들, 개정 교육과정서 삭제된 5·18에 다양한 의견

"교육부의 '대강화 과정' 취지에는 많은 현직 교사들이 공감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만든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5·18민주화운동' 삭제 논란과 관련 지역 교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자율성 보장에 따라 진행된 대강화 과정 취지에 공감하나, 5·18 교육 축소를 비롯해 5·18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 분위기를 우려했다.

8일 박상철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이번 논란을 두고 "교육 내용과 분량을 적정·간소화하는 취지인 대강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논란을 불식시키는 답변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역사교육 전반에 대강화 과정을 적용한 것은 이해되나 정작 6·25 전쟁에 '남침'이라는 부연 설명을 넣은 등 사실상 세부 지침을 마련한 점 등이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에도' '자유'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한 현 정부의 논리를 표현하려고 했다"며 "대강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다분히 구체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교육부가 5·18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에 (개정 교육과정)에 이처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5·18은 헌법 전문에도 수록되기로 약속된 사안이다. 대강화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동 극락초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락된 5·18이 현장에서의 관련 교육 생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경남 학생들을 국립 5·18민주묘지로 초청, 5·18 관련 강의를 하며 전국화에 힘쓰고 있다. 백 교사는 "현재도 지역과 교사

개개인에 따라서는 5·18 교육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교육과정 내 5·18 언급이 없다면 이같은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은 일각에서 부추기는 5·18에 대한 혐오 분위기를 막는데 선두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의 방침으로 이같은 역할이 약화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밖에 교육부는 뒤늦게 교과서 내 반드시 5·18을 수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의 성격에 그친다"며 "교육과정이 모든 공공교육의 근거인 만큼 교과서 내 수록 약속은 면피에 불과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부원 살레시오 교사는 이번 논란에 5·18이 또다시 상처를 받았다며 정부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려 한 여태의 관행이 낡은 패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대강화 과정에서 5·18이 누락됐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간 5·18에 무관심해온 정부의 태도부터 기인된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주장인 북한군 침투설 등에 대해 허위·불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묵인하며 5·18을 방치해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 현장에서) 각각의 민주화운동을 분절된 상태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도 보인다"고 분석하며 "민주화운동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5·18이 가지고 있는 담배락을 허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이슬기자

나주 주택 창고서 화재 발생



밤사이 전남 나주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4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났다.

독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주인 60대 여성 등 일가족 8명이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130㎡가 모두 타고 주택 1동(104㎡) 중 50㎡가 기울려 소방서 추산 425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창고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